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토론회

일시: 2009년 11월 1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갤러리 3모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전국청소년학생연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다함께

- 목 차 -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02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04
1. 전반적인 학생인권 상황의 악화	05
2. 입시, 과잉 학습 (자율학습, 보충수업, 사교육 등)	06
3.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성적, 외모 등	10
4. 거의 보장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	13
5.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두발복장규제	16
6. 없어지지 않는 체벌, 숨막히는 상벌점제	18
7. 기타 소지품, 휴대전화 규제, 급식 등	22
8.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의견	24
9. 지역 간 차이	27
10. 조사에 참여해준 학생들의 말들	29
11. 결 론	34
학생인권 학교생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요약 (경남)	35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토론회 보도자료	43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51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의 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또 이명박 정부 이후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국민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것이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정부는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아웃오브안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도 없고 전문성도 별로 없는 청소년단체들이 실태조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고생스럽더군요. 왜 여론조사 같은 걸 업체에 돈 주고 맡기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조사한 결과를 이명박 정부 이후 1년하고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80주년 학생의 날에 맞춰,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현재 학생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 동시에 2008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에 학생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학교 CCTV와 같은 감시의 문제, 학생간 폭력, 이성교제/동성교제에 대한 처벌, 학교 시설의 문제 등 조사하고 파악해야 할 학생인권 실태는 많습니다. 그러나 설문지 분량의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하여 불가피하게 많은 조사항목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그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듣지도 않는 상황 때문에라도 굳이 학교자율화, 대입자율화, 일제고사 등에 대해 학생들의 인지도와 의견을 묻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울산, 경남, 서울, 제주 등지의 교육청/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휴대전화금지조례에 대해서도 인지도와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이 다음 순서에 설명하겠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 교육정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부터, 두발규제 등 언뜻 보기에는 교육정책과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보이는 부분까지 골고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국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를 마냥 무

시할 수는 없을 일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최근의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학생의 날의 기원이 된 1929년 학생들의 항일 운동 때에도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표현의 자유,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게 즐기치게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해왔지만, 어째서 정부는, 학교는, 이 사회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아니, 바뀌기는커녕 왜 더 안 좋아지는 모습까지 보이는 걸까요? 정말로 미성숙한 것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의 현실 뿐 아니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까지, 청소년/학생 분들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및 방법

: 2009년 8월 31일 ~ 10월 1일 (약 1개월)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설문 참여. 학생과 교사들의 협조를 통해 학교 안에서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함. (※ 경남지역에서도 같은 설문지로 조사했으나 자체적으로 입력, 처리하여 결과를 냈기에 참고를 위해 따로 실음.)

◎ 분석 도구 : EXCEL2007과 SPSS12.0K, 계산기.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으로 분석.

◎ 전국 조사한 중학생 수 : 656명

전국 조사한 고등학생 수 : 1366명

◎ 성별 및 지역분포

○ 전국 중학생

남자	여자	기타(TG 등)	무응답
30.8% (202)	67.5% (443)	0.2% (1)	1.6% (10)
수도권	영남	호남	
54.1%(355)	13.5%(88)	14.0%(131)	
충청	강원	제주	무응답
9.8%(64)	1.4%(9)	0.0%(0)	1.4%(9)

○ 전국 고등학생

남자	여자	기타	무응답
34.6%(472)	65.2%(890)	0.1%(2)	0.1%(2)
수도권	영남	호남	
47.4%(648)	20.1%(274)	26.1%(357)	
충청	강원	제주	무응답
4.2%(58)	1.4%(19)	0.1%(2)	0.6%(8)

1. 전반적인 학생인권 상황의 악화

현재 전반적인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거나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중학생 6.7%, 고등학생 4.6%에 불과하다. 침해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과 매우 침해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을 합하면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에 이른다.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학생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질문들에서 나온 결과를 고려할 때 “보통”으로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인권 침해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 그리고 다른 학교 상황과 비교하여 자신이 현재 다니는 학교가 보통의 수준이라는 의미로 답한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일 것 등으로 추정된다.

2008년 이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중고등학생 모두 극소수이다. 변화가 없다는 답과 악화되었다는 답이 높다.(모른다는 답이 높은 것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이전의 학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없다는 답을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학교 상황이 학생인권 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학생인권이 일정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전부터도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매우 잘 보장	잘 보장	보통
1.8% (12)	4.9% (32)	42.4% (278)
침해	매우 침해	무응답
23.8% (156)	22.4% (147)	4.8% (31)

현재의 학생인권 보장 상황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매우 잘 보장	잘 보장	보통
1.1%(15)	3.5%(48)	33.4%(456)
침해	매우 침해	무응답
32.4%(443)	27.3%(373)	2.3%(31)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3%(28)	28.0%(184)	28.7%(188)	33.5%(220)	5.6% (36)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보장하는방향	침해하는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0%(54)	32.5%(444)	37.3%(510)	23.9%(327)	2.2%(30)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부정적이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38.4%, 고등학교의 경우 51.9%나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중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6%(4)	9.3%(61)	20.9%(137)	24.4%(160)	38.4%(252)	6.4%(42)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2%(3)	3.7%(50)	13.6%(186)	28.0%(382)	51.9%(709)	2.6%(35)

2. 입시, 과잉 학습 (자율학습, 보충수업, 사교육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 성적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이 중학생 50%, 고등학생 61%로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중학생 44.2%, 고등학생 51.9%, 증가가 중,고등학생 모두 30% 가량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한 학생은 중학생 0.8%, 고등학생 0.9%에 불과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입시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입시 및 성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많이 받음	조금 받음	보통	잘 안 받음	전혀 안 받음	무응답
50.0% (328)	30.8% (202)	11.0% (72)	4.1% (27)	1.5% (10)	2.6%(17)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많이 받음	조금 받음	보통	잘 안 받음	전혀 안 받음	무응답
61.1%(834)	25.6%(350)	8.3%(114)	2.5%(34)	1.5%(20)	1.0%(14)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많이 감소	무응답
44.2% (290)	28.7% (188)	23.3% (153)	0.8% (5)	0.8% (5)	2.3%(15)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많이 감소	무응답
51.9%(709)	29.9%(408)	15.8%(216)	0.9%(12)	0.6%(8)	1.0%(13)

중학생들도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거나 0교시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기된 바 있다.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보충수업(0교시), 보충수업 등의 현실은 어떨까? 이번 조사에서도 2008년 이후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한 중학생이 36.7%에 달했다. 원래부터 야자나 각종 보충수업들이 많았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32.7%가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짐
36.7% (241)	13.4% (88)	2.6% (17)	22.7% (149)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짐	별다른 변화가 없음	잘 모름	무응답
3.0% (20)	25.2% (165)	22.3% (146)	2.8% (18)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짐
32.7%(446)	9.8%(134)	2.6%(36)	20.1%(274)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짐	별다른 변화가 없음	잘 모름	무응답
2.3%(32)	35.9%(491)	17.0%(232)	0.9%(12)

야간자율학습이나 방학 중 자율학습, 보충수업도 강제한다는 응답도 많아서, 입시와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저녁 시간과 방학을 빼앗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방과후학교조차도 강제된다는 답이 중학교 35.2%에 이르러서 방과후학교가 강제적인 보충수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느끼게 했다. 아침보충수업(소위 0교시 수업)도 중학생의 10.2%, 고등학생의 15.4%가 강제라고 답했는데, 0교시

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자율학습을 시킨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15.4% (101)	53.5% (351)	19.0% (125)	21.2% (139)
방과후학교	점심시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학 보충수업, 자율학습	무응답
85.1% (558)	8.4% (55)	41.9% (275)	4.9% (32)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	오후저녁보충수업
85.9%(1173)	57.5%(785)	20.9%(285)	72.1%(98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56.9%(777)	13.5%(184)	80.6%(1101)	0.6%(8)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4.4% (29)	24.4% (160)	10.2% (67)	10.8% (71)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35.2% (231)	2.9% (19)	14.9% (98)	19.2% (126)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60.0%(819)	35.6%(486)	15.4%(210)	54.7%(747)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28.5%(389)	7.3%(100)	53.1%(726)	6.5%(89)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0.5% (3)	1.1% (7)	0.2% (1)	0.8% (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5.8% (38)	0.3% (2)	2.1% (14)	19.2% (126)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5.0%(68)	1.5%(20)	1.0%(14)	2.5%(3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2.0%(27)	0.2%(3)	3.3%(45)	7.0%(96)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7.2% (47)	6.6% (43)	2.1% (14)	3.9% (2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32.6% (214)	2.4% (16)	11.1% (73)	19.2% (126)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15.4%(211)	3.0%(41)	1.5%(21)	4.9%(67)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15.7%(214)	2.4%(33)	10.8%(148)	6.7%(92)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듯 중학교의 평균 등교시간은 오전 8시 8분, 고등학생의 경우 오전 7시 45분으로, 중학생 중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한다고 답한 비율이 38.1%에 고등학생 86.9%로, 학생들은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해야만 한다. 하교시간마저 오후 4시 이후라고 답한 중학생이 60.8%, 고등학생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 하교한다는 응답이 64.7%이다.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등학생은 평균 12시간 35분, 중학생은 평균 8시간 4분에 육박한다. 성인들도 하루 8시간 노동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거의 지켜지지 않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하며 여가가 충분치 못함을 알 수 있다.

평균 수면시간은 이런 과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학생은 6.7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고작 5.6시간이며, 중학생 중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이 40.7%에 고등학생의 경우 75.3%였다. 건강을 위해서는 대개 하루 7-8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 모두 잠이 부족하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야학원 운영을 규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밤 11시, 12시, 1시에 학원이 끝난다는 답도 상당수 되었다. 청소년들이 잘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지만, 정부와 국회가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입시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현실부터 고려하길 바란다.

등하교시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평균 수면시간, 학원이 끝나는 시간 등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8시08분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7시45분
오전 8시 이전 등교	38.1%(250)	오전 8시 이전 등교	86.9%(1181)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4시15분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8시21분
오후 4시 이후 하교	60.8%(399)	오후 9시 이후 하교	64.7%(884)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8시간4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12시간35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9시31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11시20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14.2시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8.3시간
평균수면시간	6.7시간	평균수면시간	5.6시간
6시간 이하 수면	40.7%(267)	6시간 이하 수면	75.3%(1028)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응답 중에는 국영수사과 등 주요 입시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 사교육의 경우도 일부는 입시를 위한 것이었다. 2008년 이후에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답한 중학생은 30.3%, 고등학생은 20.7%였다. 권영길 의원실에서 냈던 자료를 보더라도 입시 사교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고 있으나 사교육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방과후학교 등도 강제적 보충수업처럼 되어가고 있다.

사교육 받는 과목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국영수사과	예체능	입시(논구술 등)	기타	무응답 (사교육 받지 않는 학생 포함)
67.2% (441)	5.5% (36)	2.0% (13)	2.4% (16)	34.5% (227)

사교육 받는 과목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국영수사과	예체능	입시(논구술 등)	기타	무응답 (사교육 받지 않는 학생 포함)
42.2%(576)	4.8%(65)	3.7%(50)	1.7%(23)	49.5%(676)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0.3% (199)	5.3% (35)	36.8% (241)	21.8% (143)	5.8% (38)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0.7%(283)	10.7%(146)	41.2%(563)	20.6%(282)	6.7%(91)

3.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성적, 외모 등

차별 중에서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원인으로 성적을 꼽은 중학생이 59.3%, 고등학

생이 69.6%에 달했다. 이는 20%대인 성별, 나이 및 학년, 외모나 신체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외모로 인한 차별, 나이나 학년으로 인한 차별이 많았다.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은 당사자들이 수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수치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역시 주목해야 할 차별임은 물론이다. 또한, 성적이 주된 차별 원인이라 그런지 차별의 방법 또한 학생들에 의한 것보다 교사에 의한 것이 많았다.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시설 이용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존재했다.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59.3%(389)	20.1%(132)	23.3%(153)	6.1%(40)	15.4%(101)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2.3%(15)	12.6%(83)	28.4%(186)	22.4%(147)	3.7%(24)	6.3%(41)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69.6%(951)	14.9%(204)	27.6%(377)	3.5%(48)	7.3%(100)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1.0%(13)	15.7%(214)	25.9%(354)	17.0%(232)	1.7%(23)	3.1%(42)

차별의 방법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교사언어폭력	교사체벌	학생괴롭힘	시설이용
41.2%(270)	35.8%(235)	23.3%(153)	7.3%(48)
임원출마	정보공개	기타	무응답
13.0%(85)	6.1%(40)	5.3%(35)	28.5%(187)

차별의 방법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교사언어폭력	체벌	학생괴롭힘	시설이용
46.5%(635)	31.7%(433)	15.4%(210)	16.5%(226)
임원출마	정보공개	기타	무응답
14.6%(200)	8.4%(115)	6.8%(93)	22.2%(303)

2008년 이후 차별 상황 변화에 있어서는 중고생 모두 변화없다는 답과 모른다는 답이 가장 높지만 증가했다는 답이 감소했다는 답에 비해 높다. 구체적으로 차별이 어떤 분야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가장 높지만,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답이 9~1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집단의 경우 입시 성적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전체보다 더 높다.

2008년 이후 차별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차별증가	차별감소	일부 영역은 증가, 일부 영역은 감소	잘 모르나 변화없는것 같다
20.6%(135)	1.4%(9)	0.2%(1)	1.2%(8)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3.5%(220)	36.7%(241)		6.5%(42)

2008년 이후 차별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차별증가	차별감소	일부 영역은 증가, 일부 영역은 감소	잘 모르나 변화없는것 같다
19.4%(265)	1.5%(21)	0.2%(3)	0.7%(10)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9.0%(536)	34.1%(466)		4.6%(63)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9.3%(61)	1.2%(8)	0.6%(4)	0.0%(0)	0.5%(3)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증가안했다 는 답까지 포함)
0.0%(0)	1.4%(9)	1.5%(10)	4.0%(26)	73.9%(485)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11.1%(152)	1.0%(13)	1.1%(15)	0.1%(2)	0.1%(1)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증가안했다 는 답까지 포함)
0.0%(0)	0.8%(11)	0.9%(12)	3.4%(47)	81.3%(1110)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0.3%(2)	0.3%(2)	0.2%(1)	0.0%(0)	0.0%(0)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감소안했다 는 답까지 포함)
0.0%(0)	0.0%(0)	0.0%(0)	0.0%(0)	82.6%(543)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0.0%(0)	0.1%(1)	0.1%(2)	0.1%(1)	0.1%(2)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감소안했다 는 답까지 포함)
0.1%(1)	0.1%(1)	0.0%(0)	0.2%(3)	90.1%(1231)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사람(61명) 중 입시성적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답 분석 (중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 감소
70.3%	21.9%	6.3%	1.6%	0.0%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사람(152명) 중 입시성적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답 분석 (고등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 감소
75.7%	16.4%	6.6%	0.7%	0.7%

4. 거의 보장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

이번 조사결과만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답이 중학생의 경우 7.8%, 고등학생의 경우 6.2%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중학생 32.6%, 고등학교 36.9%에 달했다.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도교사가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활동에 있어서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학생회 임원에 성적제한이나 선거에서 후보의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는 것,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 골고루 나왔다. 심지어 학생회 활동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답도 중학생 16.5%, 고등학생 11.4%나 되었다.

학생회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적 문화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동아리 상황도 열악했다. 종합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고 지원이 충분하다는 대답이 중학교에서는 15.1%, 고등학교에서는 18.4%에 불과하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동아리가 학교의 선호에 따라 폐쇄되거나 불허된다는 답이 고등학교가 더 많은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동아리를 학교가 불허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중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7.8% (51)	30.2% (198)	23.9% (157)	32.6% (214)	5.5% (36)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6.2%(85)	24.9%(340)	28.3%(387)	36.9%(504)	3.7%(50)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중학생)

회의나 활동 등에 대해 지도 교사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다.	설문조사,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려면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나 선거시 후보의 의견,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23.0% (151)	24.8% (163)	15.5% (128)	20.7% (136)
잘 모름	기타	무응답	
16.5% (108)	4.3% (28)	15.5%(102)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회의나 활동 등에 대해 지도 교사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다.	설문조사,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려면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나 선거시 후보의 의견,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26.4%(360)	29.0%(396)	22.8%(312)	25.4%(347)
잘 모름	기타	무응답	
11.4%(156)	6.1%(83)	12.8%(175)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응답 (중학교)

활동 활발, 지원 충분	동아리 불허, 폐쇄	지원부족	활동 거의 없음
15.1% (99)	14.6% (96)	32.0% (210)	39.2% (257)
학생참여부족	잘모름	기타	무응답
18.0% (118)	3.2% (21)	4.7%(31)	5.3%(35)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활동 활발, 지원 충분	동아리 불허, 폐쇄	지원부족	활동 거의 없음
18.4%(252)	25.2%(344)	44.0%(601)	30.1%(411)
학생참여부족	잘 모름	기타	무응답
21.2%(290)	2.6%(35)	4.0%(55)	2.8%(38)

2008년 이후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는, 변화없다 또는 모른다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위축되었다는 답이 중학생 14.0%, 고등학생 19.6%였

다.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답한 중학생의 35.9%, 고등학생의 50.0%가 위축의 원인으로 입시환경변화를 꼽았다. 입시, 성적,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과 연관지어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입시환경 변화 외에도 학교 지원의 변화, 교장 교감 교사 등의 변화가 주된 이유로 지목된 것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2008년 이후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교)

학생회 동아리 활발해짐	학생회 동아리 위축됨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6.3%(41)	14.0%(92)	37.3%(245)	35.5%(233)	5.8% (38)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2008년 이후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학생회 동아리 활발해짐	학생회 동아리 위축됨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8%(65)	19.6%(268)	37.3%(509)	34.8%(475)	3.2%(44)

활발해졌다고 답한 사람들(41명) 중 이유로 꼽은 것 (중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26.8%	26.8%	17.1%	31.7%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26.8%		4.9%	7.3%

활발해졌다고 답한 사람들(65명)이 이유로 꼽은 것 (고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21.5%	15.4%	47.7%	30.8%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12.3%(33)		4.6%	3.1%

위축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유로 꼽은 것 (중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32.6%(30)	37.0%(34)	22.8%(21)	34.8% (32)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35.9%(33)		4.3%(4)	8.7% (8)

위축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유로 꼽은 것 (고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41.0%	44.8%	13.8%	41.4%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50.0%		3.4%	8.2%

5.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두발복장규제

학생들이 두발규제 등을 폐지하라는 운동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두발복장규제 상황은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 2000년, 2005년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하여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 조치는 두발규제 상황 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두발규제에 있어서는 이미 진즉에 ‘학교자율화’가 되었던 셈인데, 그 이후로도 두발규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이 95.3%, 고등학생이 94.2%에 달한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들이 교복을 입히는데도 교복을 강제로 입힌다는 답이 중학생 77.0%, 고등학생 77.5%로 의외로 적은 것(?)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악세서리, 양말 등 다양한 복장규제가 존재했다.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5.3% (625)	2.9% (19)	0.8% (5)	0.3% (2)	0.8% (5)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4.2%(1287)	4.2%(58)	1.0%(13)	0.2%(3)	0.4%(5)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을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0% (505)	70.7% (464)	38.7% (254)	78.4% (514)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85.1% (558)	64.6% (424)	1.4% (9)	1.8% (12)	0.3% (2)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5%(1058)	74.4%(1011)	33.7%(461)	67.9%(928)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79.1%(1080)	65.6%(896)	1.5%(21)	2.8%(38)	0.5%(7)

두발복장규제 위반시 처벌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이나 징계로 처벌한다는 답이 가장 많은 편이다. 교사가 강제로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강제이발이 23~29%나 응답이 나왔는데, 특히 강제이발을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자 폭력으로 보고 중단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두발복장규제 위반 시 처벌 방법에 대한 응답 (중학생)

강제이발	체벌	벌점이나 징계	훈계
28.7% (188)	56.3% (369)	69.1% (453)	54.0% (354)
악세서리 등 압수	재검사	기타	무응답
61.0% (400)	55.5%(364)	1.5% (10)	0.7% (5)

두발복장규제 위반 시 처벌 방법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강제이발	체벌	벌점이나 징계	훈계
23.5%(321)	49.3%(674)	74.7%(1020)	54.5%(744)
악세서리등 압수	재검사	기타	무응답
58.6%(801)	73.4%(1003)	1.7%(23)	05%(7)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도 강화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규정이 학생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거나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는 대답도 중고등학생 모두 각각 20%와 40%를 넘는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두발복장규제가 별 상관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두발복장규제다. 또한 학교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학교들이 학생들을 더 통제하고, '단정한 학생'들로 만들어 지역 사회나 보호자(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에 대한 평판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4.1% (27)	21.2% (139)	4.6% (30)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2.2% (277)	26.7% (175)	22.7% (149)	2.6% (17)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2.6%(36)	25.5%(348)	4.3%(59)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1.1%(562)	34.0%(465)	17.6%(241)	1.0%(14)

6. 없어지지 않는 체벌, 숨막히는 상벌점제

체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이다. 교육부는 체벌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 체벌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거나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다수가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고생 모두 50% 가량이 1주일에 1회 이상 높은 빈도로 체벌을 경험한다고 했다.

체벌의 이유는 두발복장규제 위반, 과제 및 수업태도, 지각결석이 고르게 5-60%에 달했다. 성적으로 인한 체벌도 상당수 존재했고, 교사지도불응이나 교사, 학교에 대한 저항 또한 많은 응답이 나와서,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 그 학생들과 대화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적 올리거나 두발복장규제 위반과 같은 입시경쟁과 억압적인 학교 규칙에서 비롯되는 체벌이 많다는 것은 체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52.1%(342)	15.5%(102)	8.7%(57)	14.9%(98)	5.8%(38)	2.9%(19)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49.9%(681)	14.0%(191)	9.5%(130)	19.9%(272)	5.1%(70)	1.5%(20)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6.4%(370)	44.1%(289)	62.3%(409)	18.9%(124)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28.7%(188)	25.0%(164)	7.2%(47)	12.5%(82)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5.4%(757)	52.3%(714)	54.8%(749)	13.3%(181)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34.6%(472)	22.6%(309)	7.5%(102)	7.5%(102)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매우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31.6%(207)	16.0%(105)	11.6%(76)	23.3%(153)	14.0%(92)	3.5%(23)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매우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35.9%(490)	15.4%(211)	12.2%(166)	22.8%(312)	11.2%(153)	2.1%(29)

2008년 이후 체벌 및 언어폭력의 변화에서도, 변화없다 또는 모른다는 답 다음으로 체벌이 강화되었다는 답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교육부에서는 체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체벌이 줄어들거나 약해졌다는 답은 거의 없어서, 교육부의 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체벌이 더 심해진 이유는 두발복장규제가 강화된 것이나 등하교시간 및 자율학습이 강화된 것 등과 연관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체벌강화	체벌완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완화
24.2%(159)	5.2%(34)	13.4%(88)	3.8%(2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9.0%(190)	36.1%(237)		3.2%(21)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체벌강화	체벌완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완화
20.1%(275)	4.9%(67)	13.8%(188)	3.3%(45)
변화없다	모름		무응답
34.9%(477)	34.5%(471)		1.6%(22)

정부가 체벌의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린마일리지제, 상벌점제이다. 그러나 정말로 학생들 입장에서 상벌점제가 대안일까? 상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에 대해 질문했더니 중학생의 45.4%, 고등학생의 49.4%가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징계가 증가했다고 답한 학생들 중 다수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상벌점제 도입을 지목했다. 상벌점제 도입이 규제투성이인 학교에서 징계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기까지 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교내폭력보다 두발복장규제 위반이 더 수치가 높은 것도 볼 수 있다. 중학생도 두발복장규제 위반이 주된 징계 사유 중 하나인데, 불필요한 두발복장규제를 없애기만 해도 체벌이나 징계가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중고등학교 모두 흡연 및 음주가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학교가 흡연하는 학생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금연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흡연하는 학생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지도불응이나 교사, 학교에 대한 저항도 꽤 많은 응답이 나온 것도 주목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징계가 증가했다는 답이 많은데 그 원인으로는 상벌점제 도입, 교장, 교감, 교사의 변화, 학교 규정의 변화가 주로 지목되었다. 두발복장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답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중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5.4%(298)	4.7%(31)	21.8%(143)	21.3%(140)	3.5%(23)	3.2%(21)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9.4%(675)	5.6%(77)	20.5%(280)	18.7%(25)	2.9%(39)	2.9%(39)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교내폭력	음주흡연
45.4%(298)	27.6%(181)	65.2%(428)	64.6%(424)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저항	기타	무응답
32.3%(212)	41.2%(270)	3.2%(21)	4.2%(27)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교내폭력	음주흡연
54.0%(737)	29.6%(404)	48.6%(664)	67.5%(922)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 저항	기타	무응답
34.8%(476)	33.7%(461)	5.2%(71)	2.3%(31)

2008년 이후 징계 받는 것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교)

징계증가	징계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8.3%(251)	4.3%(28)	19.8%(130)	34.1%(224)	3.6%(23)

2008년 이후 징계 받는 것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징계증가	징계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2.8%(448)	3.7%(51)	25.8%(353)	35.1%(480)	2.5%(34)

징계가 증가했다는 사람(251명) 중 증가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45.4%	52.2%	45.4%	17.5%	10.3%	0%	3.1%

징계가 증가했다는 사람(448명) 중 증가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47.8%	52.2%	48.0%	14.3%	9.0%	1.1%	4.0%

징계가 감소했다는 사람(28명) 중 감소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21.4%	32.1%	25.0%	21.4%	25.0%	0.0%	7.1%

징계가 감소했다는 사람(51명) 중 감소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1.2%	21.6%	25.5%	15.7%	33.3%	3.9%	11.8%

7. 기타 소지품, 휴대전화 규제, 급식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가 규정으로 금지(등교시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돌려주는 것도 포함)되었다는 답은 중학생 57.3%, 고등학생 47.0%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도 중학생의 70.9%, 고등학생의 53.1%가 휴대전화를 꼽았다.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규제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에 대한 응답 (중학생)

휴대전화 소지가 규정으로 금지	수업시간만 금지	교사에 따라 규제
57.3% (376)	24.1% (158)	5.9% (39)
규제 안함	기타	무응답
6.4% (42)	3.2% (21)	0.6% (4)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휴대전화금지	수업시간만금지	교사에 따라 규제
47.0%(642)	30.2%(412)	10.7%(146)
규제안함	기타	무응답
10.5%(143)	0.5%(7)	1.1%(16)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 (중학생)

휴대전화	담배나 술	음악기기 전자기기	책	화장품, 장신구, 옷
70.9% (465)	53.0% (348)	40.4% (265)	38.7% (254)	32.0% (210)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술담배	휴대전화	책	옷장신구	전자기기
54.7%(747)	53.1%(725)	30.1%(411)	29.2%(399)	26.5%(362)

소지품 검사 빈도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에 1회이상	1달에 1회이상	1달에 1회미만	드물게 특별한 경우	소지품 검사 없음	기타	무응답
4.9% (32)	5.0% (33)	5.9% (39)	55.2% (362)	23.9% (157)	2.3% (15)	2.7% (18)

소지품 검사 빈도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에 1회이상	1달에 1회이상	1달에 1회미만	드물게 특별한경우	소지품검사 없음	기타	무응답
4.0%(54)	5.1%(69)	5.5%(75)	56.7%(775)	26.2%(358)	1.2%(17)	1.3%(18)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규제의 경우 두발복장규제나 자율교충학습 등에 비하면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변화가 없다는 답이 높다. 하지만 완화되었다는 답이 거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휴대전화 규제가 상대적으로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해졌다는 답이 많은 편인데, 이 역시 ‘면학 분위기’를 강조하게 된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소지품검사나 휴대전화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소지품검사강화	소지품검사완화	휴대전화규제강화	휴대폰규제완화
16.0% (105)	2.7% (18)	18.6% (122)	2.3%(1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9.8% (261)	25.6%(168)		2.3% (15)

소지품검사나 휴대전화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소지품검사강화	소지품검사완화	휴대전화규제강화	휴대전화규제완화
10.4%(142)	3.5%(48)	18.3%(250)	3.3%(4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2.0%(574)	26.6%(364)		1.8%(25)

급식의 변화의 경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답이 가장 높는데, 좋아졌다는 답에 비해 나빠졌다는 답 역시 많은 편이다.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직영급식을 규정하던 규제들이 사라진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나쁨”은 원래 문항에는 없는 보기이지만 기타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이 나와서 따로 분류해보았다. ‘변화없음’ 속에도 이런 의미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급식의 질에 대해서 설문지 분량 문제상 따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008년 이후 급식의 질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좋아짐	나빠짐	예나 지금이나 나쁨	
9.6%(63)	23.0% (151)	1.1% (7)	
변화없음	모름	기타	무응답
45.3%(297)	16.0%(105)	1.6%(10)	4.6%(30)

2008년 이후 급식의 질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좋아짐	나빠짐	예나 지금이나 나쁨	
12.9%(176)	28.0%(382)	1.8%(24)	
변화없음	모름	기타	무응답
39.5%(540)	14.2%(194)	1.1%(15)	2.3%(32)

8.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의견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당사자인데도 교육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교육정책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기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제고사나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금지조례 등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책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30% 이상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예외적으로 대입자율화에 관해서 고등학생들의 인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고등학생들이 특히 대학입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입자율화에 있어서 중학생들은 인지도가 매우 낮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이것이 현재 경기도지역에서만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이 또한 최근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응답 또한 학생들이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는 답이 높은 걸로 보인다. 실제로 인지도가 낮을수록 의견이 없다는 답이 비교적 높다. 일제고사, 그린마일리지, 고교다양화, 휴대전화금지조례 모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자율화도 반대 의견이 다소 높다. 대입자율화는 중학생의 경우 찬성이 다소 많고 고등학생의 경우 반대가 다소 많은데, 중학생은 대입자율화에 대해 모른다는 답이 많고 고등학생은 잘 알거나 대략 안다는 답이 많다.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 정리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으나, 대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아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입자율화에 마냥 찬성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나 대입자율화 등 “자율화”라는 명칭의 정책에 대해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학교자율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5.9%(39)	21.0%(138)	36.1%(237)	29.1%(191)	7.8%(51)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32.2%(211)	34.5%(226)	28.2%(185)	5.2%(34)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4.8%(66)	26.0%(355)	35.4%(484)	29.5%(403)	4.2%(5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28.8%(393)	48.2%(659)	20.4%(278)	2.6%(36)

[그린마일리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6%(135)	36.3%(238)	19.7%(129)	18.8%(123)	4.7%(31)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5.4%(101)	65.1%(427)	14.8%(97)	4.7%(31)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4.5%(198)	35.1%(479)	23.6%(322)	23.6%(322)	3.3%(45)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7.2%(235)	66.4%(907)	13.9%(190)	2.5%(34)

[일제고사]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7.4%(180)	39.9%(262)	17.5%(115)	10.1%(66)	5.0%(33)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9.6%(63)	74.6%(488)	11.6%(76)	4.4%(29)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4%(278)	47.9%(654)	18.2%(249)	10.1%(138)	3.5%(4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5.7%(214)	72.2%(986)	9.6%(131)	2.6%(35)

[고교다양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9.0%(59)	22.1%(145)	35.8%(235)	28.0%(184)	5.1%(33)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22.0%(144)	51.7%(339)	21.5%(141)	4.9%(32)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6%(104)	26.0%(355)	32.1%(438)	31.0%(423)	3.3%(4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8.6%(254)	63.5%(868)	15.2%(207)	2.8%(37)

[대입자율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2%(47)	16.3%(107)	39.3%(258)	31.6%(207)	5.7%(3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44.4%(291)	32.6%(214)	18.3%(120)	4.7%(31)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1.6%(159)	38.3%(523)	28.0%(382)	18.7%(256)	3.3%(4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40.0%(546)	43.9%(600)	11.1%(152)	5.0%(68)

[학생인권조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3%(48)	15.9%(104)	38.3%(251)	33.7%(221)	4.9%(32)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61.4%(403)	13.6%(89)	19.5%(128)	5.5%(36)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4.2%(58)	13.0%(177)	38.3%(523)	41.8%(571)	2.6%(35)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73.1%(998)	10.2%(139)	11.5%(157)	5.3%(72)

[휴대전화금지조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3%(133)	30.3%(199)	22.9%(150)	22.0%(144)	4.6%(30)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0.5%(69)	68.9%(452)	16.0%(105)	4.6%(30)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0.8%(148)	27.0%(369)	28.8%(394)	30.7%(419)	2.6%(3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7.4%(101)	77.0%(1052)	10.4%(142)	5.2%(71)

9. 지역 간 차이

지역별로 학생인권 보장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 그리고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 전체 비율과 비교해볼 때 영남지역(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의 학생인권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다. 2008년 이후로 학생인권 상황이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답 또한 영남지역이 가장 높았다. (응답이 적어서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는 제주나 강원지역은 제외) 실제로, 따로 첨부된 경남지역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자율교충학습이 강화되었다거나 두발복장규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체로 보수적인 영남지역이 학생인권 상황도 안 좋으며 악화 경향도 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등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355)	1.1%	3.9%	43.4%	22.8%	22.5%
영남(88)	2.3%	3.4%	34.1%	26.1%	31.8%
호남(131)	3.8%	9.9%	46.6%	23.7%	12.2%
충청(64)	1.6%	1.6%	40.6%	28.1%	25.0%
강원(9)	0.0%	11.1%	33.3%	22.2%	33.3%
제주(0)	0.0%	0.0%	0.0%	0.0%	0.0%
전체	1.8% (12)	4.9% (32)	42.4% (278)	23.8% (156)	22.4% (147)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648)	0.6%	3.5%	29.9%	34.0%	29.8%
영남(274)	0.0%	0.7%	23.0%	44.9%	30.3%
호남(357)	3.1%	5.6%	47.1%	20.4%	21.0%
충청(58)	0.0%	3.4%	43.1%	31.0%	20.7%
강원(19)	0.0%	5.3%	15.8%	31.6%	31.6%
제주(2)	0.0%	0.0%	0.0%	100.0%	0.0%
전체	1.1%(15)	3.5%(48)	33.4%(456)	32.4%(443)	27.3%(373)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355)	3.4%	27.3%	28.7%	32.4%
영남(88)	4.5%	39.8%	30.7%	21.6%
호남(131)	6.9%	15.3%	23.7%	51.9%
충청(64)	4.7%	35.9%	31.3%	25.0%
강원(9)	0.0%	44.4%	44.4%	11.1%
제주(0)	0.0%	0.0%	0.0%	0.0%
전체	4.3%(28)	28.0%(184)	28.7%(188)	33.5%(220)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648)	4.3%	32.4%	41.4%	20.1%
영남(274)	1.8%	44.5%	35.4%	17.2%
호남(357)	4.8%	23.2%	30.3%	38.7%
충청(58)	6.9%	29.3%	46.6%	15.5%
강원(19)	0.0%	42.1%	31.6%	10.5%
제주(2)	0.0%	0.0%	100.0%	0.0%
전체	4.0%(54)	32.5%(444)	37.3%(510)	23.9%(327)

10.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말들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인권침해 등을 묻은 서술형 답에 해준 답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원문 그대로 실은 것이다. 두발규제, 입시경쟁, 체벌, 급식, 학생회 등이 모두 골고루 개선해야 할 인권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심각한 체벌, 언어폭력을 적어달라고 한 것에도 충격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

-두발규정을 어겼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시간을 받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발 규정을 어겼다고 강제이발 같은 규정은 저희 학교에 분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담임선생님은 억지로 제 머리를 자르셨고, 두발규정보다 훨씬 짧은 머리로. 게다가 제가 원하지 않는 머리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의 머리를 막무가내로 자르셨습니다 규정보다 훨씬 짧게요. 인권침해를 당한 기분이 들었고 상당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선생이 지 기본대로 애들막대함. 지 뺨치면 애들 좇나게 팽. 규정도 존나 심해서 애들 숨도 못 씬. 머리를 때림—— 선생한테 말도 못 걸게함 웃는 걸 본적이 없음. 냅다 소리부터 지름 귀싸대기를 때림.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해 나눠준 손소독제를 교무실에 갖다두고 선생 혼자 씬. 다른 반 애들은 선생님이 다 짜주는데 우리 반만 절대 못 씬 선생이 지만 신종플루 안 걸릴려함.

-선크림 발랐다고 뭐라하고 뺨때리고 머리질질 끌고가고 술집에서 일할거냐고 쌍욕하고 성적 떨어진 점수대로 1점당 1대씩 맞고

-교복을 조금 줄였다고 포르노 잡지에 나오는 애들이냐고 그러고 술 집 여자냐고 그러고. 사실 교복을 줄인 것도 아닙니다.

치마 딱 한단 반 줄이고 셔츠는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작은 사이즈일뿐 그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마른 체형이라서..)

그런데 그런 수치심 느끼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가슴도 만져봤습니다.

뭐 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나..

-학교에서 머리 긴 친구한테 한 여선생님이 "너희 엄마 술집다니시니?","살아계시니?" 등등의 막말을 퍼부었음. 그래서 결국 그 친구 울었고 부모님학교에 찾아오셨었음.

- 일제고사를 반대, 모두 3번으로 마킹해서 제출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종례시간에 비슷하게 한 몇몇 아이들을 불러내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당했다. 그 후에도 방과후에 반에 남아 반성문을 쓰고 부모님께 싸인을 받아오라고 했다. (나는 그 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반성문을 쓰지 않고 집에서 내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4장 써서 그 다음 날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했다. 선생님은 읽으신 듯 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

방과후학습. 영어, 수학 보충. 담임선생님이 일제고사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인 아이들을 불러모아 방과후학습을 아이들에게 거의 반 강제로 시켰다. 난 실기시험이 100%인 예고를 가기위해서 매일 연습을 나간다. (정식학원이 아닌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냥 집에서 영상을 돌려보며 연습한다.) 그러므로 사유를 예고준비로 해서 방과후학습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영어담당인 담임선생님이 방과후학습을 반대 한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업시간 태도를 심히 과장해 말하고 시키게끔 유도하였다.

-돈없다고학교오지말라고함. 발로 배깁.

-두발규제, 강제야자&강제보충학습

야자가 왜 야자입니까?

야간 자율학습이잖아요

근데 왜ㅋㅋㅋㅋㅋㅋ선택권이없는거죠?

방과후수업도

동의서는 왜받아가요?

동의안함 체크도 못하게하면서?ㅋㅋㅋㅋㅋㅋ

-두발규제/ 강제야자/ 선생님들 실적올리려고 학생 꿈 무시하고 대학에 밀어넣으려는 더럽고 무지한 태도/ 체육선생들 수업불참 자기들멋대로임. 교육에 있어서 정부가 자처해서 경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정부는 대학총장들 얘기보다 현직 교사들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면에서 체제가 잘 이뤄진 나라를 본받아 우리나라 색깔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당연한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머리만좋지 쓸 줄을 모르는 것 같다.

-그린마일리지는 정말 없어져야한다.

학생을 점수로만 판단하는 그런 썩은 정책은 없어져야한다.

강제야자도 없어져야한다.

강제로학교에 잡아 놔 봤자 하는애들 별로없다.

두발규제도 없어져야한다.

길이만이라도 풀렸으면.

학생죽이는 교육정책내놓지마시고 이런 설문조사 하지 않게끔 좀 잘좀 하세요.

- 벌점제 때문에 복장규제가 너무 심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더 심해져서 복도도 못돌아다니겠다--

뭐만하면 '너 벌점이야 몇학년 몇반' 뭐만하면 '너 징계당하고싶어?'정말 짜증난다.

깜빡하고 리본,넥타이 안가져온것도 벌점. 규정대로 안에 흰티입었는데 더워서 하복 블라우스 벗어놓은것도 벌점. 안에 흰티인데 티에 써있는 글씨가 너무 튀다고 벌점.

단정하지 못하다고 벌점. 그렇게 조금씩 쌓이면 징계다...

-그린마일리지 반대표가 많아서 재투표함. 규정도 비공개로 투표함.

-공교육 강화를 내세운 이명박정부였으나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자사고 건립 추진으로 인한 일반계고 학생들의 위축된 입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가. 조금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정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두발규제, 강제야자, 체벌, 학생회, 급식, 입시경쟁, 아침저녁 보충, 방과후학교 등등 설문지에는 희망과 불희망이 있으나 선생들이 강제로 희망에 체크하게하고 또, 불희망에 체크해도 전혀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0교시며 방과후 학교나 아침저녁보충이라던가 야자 등은 나를 스트레스받게한다. 심각하게 스트레스받는다.

희망, 불희망 반영되지도 않을거면서 도대체 왜 그럼 설문조사를 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가질 않는다.

0교시와 야자만이라도 제발 폐지했으면 좋겠다.

잠을 자고싶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싶다.

노무현대통령님정권때만해도 보충같은 것은 없었으나 이명박정부때부터 갑자기생겼다. 입시지옥이다.

-두발규제, 강제야자,입시경쟁.

그린마일리지는 특히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점수로써 메긴다는 소린데 안그래도 점수로 매겨지고있고

학생은 선생님의 점수를 메기고 선생은 학생의 점수를 메깁니다.

죽고죽인다는 소리죠. 기분이나쁘네요. 사람이 한번쯤은 지각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점수를 깎다니요. 등교 시간을 늦춰준다면 또 모를까.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 6시간 자면서 생활을 합니까. 시험기간땀 6시간도아니죠 2~3시간?

그럼 학교에서 부족한 잠을 채우려들테고 수업을 잘못듣죠. 그럼 당연히 효율성도떨어질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잡아두면뭘해요. 그리고 저희학교만 그런지 몰라도 수업시간에 자는것도 점수 깎는다면서요? 참나

그리고 부모님께 문자를 날리는것도 그럴습니다

학생이 꼭 애완동물이 된것만같네요.

-강제야자는 정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다

2009년에만 우리학교 학생중 두명이 자살해서 죽었다.

사실 자살기도한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한명은 학교에서 떨어졌다.

우리모두는 그 광경을 봤고 우울했고 슬펐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상황인것 같다.

무섭다.

학교는 정신병원같고 선생님은 우리를 감시한다.

아침 여섯시반에 일어나야하고 집에 오면 열시인 생활이 매일인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우리는 사람으로 대우받지않는다.

우리의 인권은 침해당하고있고 사는것자체가 힘겹다.

야자같은것은 선진국들은 전혀 하지 않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아이들을 밤 아홉시 열시까지 잡아두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환경인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

호주에 갔을때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15분에 끝났다.

한국이 너무 지옥같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걸 후회하고 학교와 교육관련의 모든 기관, 정책은 우리를 옹호할뿐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된다.

인권운운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지금 나는 나에게 인권이랑게 주어지기는 했는지 내가 인격적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고3이 될때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겠다.

- 두발규제, 강제야자, 강제보충학습, 체벌, 사교육 감소니 워니 보충 수업 해봤자 사교육 시키는 부모들은 꼭 사교육 시키는거 모르나? 보충수업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학교 수업인 건 학교 수업인 듯 싶다. 인식이 그럴 것 같다. 사교육은 학교가 아닌 사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데,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까? 지금 우리 반의 학생들만 해도 과반수가 전부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12시가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청, 신종플루 비상으로 야자 한 번 빼겠다는데 필요없다고 빼지 말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휴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압박을 준 이유가 궁금하다.

-학기초 학생들의 특이사항이나 가정사항등을 적어 내는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뤄주어야할 학생의 기본정보들과 특이사항들은 신경쓰지 않은채 의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오라고 시키며 그러한 개인정보들은 소홀히 다루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숨기고싶은 정보가 있기마련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또한 요새 학교는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등은 전혀 자율적이지 못한 타율적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말이 자율이지 이것은 타율이다. 담임이 시키는 대로 자율학습 희망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결석시에는 벌점을 부여받는다. 학생들에게 경쟁의 명분을 내세워 오히려 학교생활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타율이 아닌 자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분위기이다. '이것은 타율이 아니라 너희가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이기기위한 자율의 학습이다.' 라는 식의 꼬임에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급식의 문제로는 내가 재학중인 학교는 급식은 자율인데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내주위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돈을 내기 아깝다" 라는 하나같이 같은 이유를 말한다. 급식의 질은 예나지금이나 딱히 나아지는 것은 없다. 하루종일 학교에 메달려 학교급식에 의존할 수 밖에없는 학생들은 그런식의 부실한 급식에도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다. 의견을 말한다고 들어줄 학교이냐가 문제이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저 한달에 한번 꼬박꼬박 아까운 급식비는 나가고있다. '이대로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혹은 '이대리가 최고다' 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우리학교의 급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다.

몇몇 교사들의 행동에도 문제가 많다. 물론 이세상의 교사들중에 훌륭한 교사분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망각하게 하는 무지막지한 개념 없는 교사들의 횡포가 더 심하다는게 문제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도대상으로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것이다. 학생도 사람이고 인권이있다. 그런 인권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말만을 따라야하고 무조건 규정에 따라 생활하고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지 알 수가 없다.

-학교의 등교시간을 늘리고 하교시간을 줄여주길 바란다.

학생만의 자율학습 시간을 주기 위해 등교시간을 늘리고 하교시간을 줄여주자.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말라. 자율학습인데 왜 강제로 시키는것인가.

입시제도는 무조건 바꿔야한다. 학생 각자가 원하는 길로 재능을 발전시킬수 있게 학제도를 바꾸면 좋겠다. 꿈이 과학자든 문학가든 체육인이건 예술가건 똑같이 이론들만 배우며 대학들어가는게 목표는 헛된 시간낭비이며 학생을 기계화 시킨다. 학생의 재능을 발전시켜 그에 맞게 대학을 가고 목표로 향할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면 학생들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수 있을것이며 입시경쟁의 스트레스와 부담은 크게 줄것이다.

그리고 일제고사로 학생을 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 개개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데 이론들만 외우고 생각해서 시험을 쳐서 줄을 세우는 일제고사는 무의미하다.

-교육정책 진심 바뀌어야 함 이견 안됨

아 그리고 학교들도 너무 경쟁적이지 않게 가야함

대학 많이 보내는걸로 경쟁하는건 좀 아닌듯 싶음

지네 경쟁때매 학생들이 너무 힘들

- 급식비가 올랐는데 중학교때의 급식보다 싸구려 음식들이 눈에 띈다. 길이의 두발자유는 되었으나 교문에서 학생부가 복장지도를 할때 걸옷을 못 입게 한다. 그리고 교실에서도 걸옷을 못 입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리고 MB정부는 제발 전국 학력평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학력평가가 대학교를 갈때 면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 학교가 난리다. MB정부의 줄세우기 정책 때문에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11. 결 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은 학생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리라는 예측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있어왔다.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도 0교시, 강제야자 등 학생인권 침해까지 ‘학교자율’에 맡기며 허용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일제고사가 강행된 후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방학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는 기사들도 났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학생인권의 현실이 실제로도 악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두들 알다시피, 두발복장규제나 소지품 압수, 강제적인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입시경쟁, 체벌,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인권 문제는 굳이 이명박 정부가 아니더라도 있어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이러한 인권침해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시공부를 요구하고 있다. 일제고사, 고교다양화 등 직접적으로 학교들을 서열화시키는 한편, 학교자율화 정책을 통해 학교들이 자유롭게 학생들을 쥐어짜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입시경쟁의 강화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당연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이 중학교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있고, 학생 자치 활동 또한 위축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 등 상벌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학생들은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정부 교육 정책 중에서 특히 학교생활과 학습 부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제고사와 그린마일리지, 고교 다양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조치가 조속히 요구된다.

학생인권 학교생활 설문조사 결과 분석(경남)

본 연구는 경상남도 마산과 창원지역의 중학교 8개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8개교로 총 16개 학교의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마산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학교 설립유형별로 균등되게 선택하여, 각 학교에서 조사대상 학급을 학년별로 2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급 내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40부가 최종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분석에는 SPSS/WIN 15.0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구 분	남자	여자	전체
중학교	294(60.0)	196(40.0)	490(100.0)
고등학교	274(62.7)	163(37.3)	437(100.0)
계	568(61.3)	359(38.7)	927(100.0)

* 이 자료집에 첨부한 것은 요약본으로, 전체 보고서는 경남지역에서 발표 후 온라인에 공개

▶ 두발 규제 관련 규정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두발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강절 규제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두발 규정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이 드러났다. 최소한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통계표는 응답자수(응답비율%) 형식임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머리카락의 길이, 염색, 파마 등 규제 규정이 있다	435(89.0)	394(90.2)	829(89.5)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31(6.3)	38(8.7)	69(7.5)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 자유롭다	0(0.0)	2(0.5)	2(0.2)
기타	23(4.7)	3(0.7)	26(2.8)

▶ 복장 관련 규제 실태

학생들은 교복 외에도 내외복, 양말, 스타킹 명찰 등 학생들을 규격화시키는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보다는 통일적인 복장 규정을 통해 학교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376(76.9)	342(78.3)	718(77.5)
교복 안팎에 옷 입는 것을 규제한다.	319(65.2)	324(74.1)	643(69.4)
양말, 스타킹, 신발의 색, 형태를 규제한다.	195(39.9)	127(29.1)	322(34.8)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280(57.3)	236(54.0)	516(55.7)
귀걸이, 핀 등 액세서리를 규제한다.	372(76.1)	329(75.3)	701(75.7)
명찰이나 배지 착용을 강제한다.	403(82.4)	371(84.9)	774(83.6)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5(1.0)	1(0.2)	6(0.6)
기타	12(2.5)	4(0.9)	16(1.7)

▶ 2008년 이후 두발·복장 관련 규정과 단속의 변화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정이나 단속이 오히려 엄격해 지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의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두발과 복장의 단속과 규정이 더욱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18(3.8)	4(0.9)	22(2.4)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33(27.8)	148(34.5)	281(30.9)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22(4.6)	8(1.9)	30(3.3)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280(58.5)	217(50.6)	497(54.7)
별다른 변화가 없다	123(25.7)	126(29.4)	249(27.4)
잘 모르겠다.	70(14.6)	49(11.4)	119(13.1)

▶ 휴대폰 관련 규정

휴대폰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생활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폰을 관리하고 예절을 지킬 수 있는 정보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휴대전화 소지하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354(72.7)	270(62.2)	624(67.8)
수업시간 중 소지만 금지되어 있다	100(20.5)	92(21.2)	192(20.8)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교사에 따라 규제하기도 한다	11(2.3)	29(6.7)	40(4.3)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 규제받지 않는다	6(1.2)	26(6.0)	32(3.5)
기타	16(3.3)	17(3.9)	33(3.6)

▶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의 실태

보충, 자율학습은 이미 고등학교의 대부분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 심지어 방학도 반납 당하고, 점심 시간까지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지난 해 일제고사 성적공개 이후 중학교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응답 결과로 나타난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야간자율학습	26(5.4)	430(98.4)	456(49.7)
아침자율학습	362(75.4)	365(83.5)	727(79.3)
아침보충수업	94(19.6)	38(8.7)	132(14.4)
오후, 저녁 보충수업	100(20.8)	351(80.3)	451(49.2)
방과후 학교	414(86.3)	106(24.3)	520(56.7)
점심시간 등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123(25.6)	52(11.9)	175(19.1)
방학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212(44.2)	389(89.0)	601(65.5)

▶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의 강제성 실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와 부모의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아 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학업에 대하여 멀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방과후 학교도 교과와 특기적성에 따라 강제성과 자발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학교에 의한 강제 참가		학교는 자율적이거나 부모에 의한 강제 참가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참가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야간자율학습	11(3.4)	277(83.7)	0(0.0)	12(30.0)	19(10.3)	9(15.8)
아침자율학습	185(56.6)	215(65.0)	1(2.5)	6(15.0)	21(11.4)	2(3.5)
아침보충수업	72(22.0)	19(5.7)	0(0.0)	1(2.5)	4(2.2)	9(15.8)
오후, 저녁 보충수업	52(15.9)	216(65.3)	7(17.5)	10(25.0)	6(3.3)	4(7.0)
방과후 학교	129(39.4)	22(6.6)	23(57.5)	7(17.5)	142(77.2)	27(47.4)
점심시간 등 자율학습 이나 보충수업	38(11.6)	3(0.9)	5(12.5)	1(2.5)	19(10.3)	7(12.3)
방학 보충수업이나 자 율학습	86(26.3)	120(36.3)	15(37.5)	22(55.0)	37(20.1)	15(26.3)

▶ 중·고등학생들의 등교시간, 학원 종료시간 및 수면시간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빠르고 학원이나 야간자율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음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에서 쌓인 피로를 채 풀 수 있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을 밖에서 군것질,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해결하게 되어 건강해 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학교	시간				계
		7시이전	7시 30분	8시 이전	8시 넘어서	
등교시간	중등	13(2.7)	28(5.8)	143(29.5)	301(62.1)	485(100.0)
	고등	77(18.2)	93(22.0)	250(59.2)	2(0.5)	422(100.0)
	계	90(9.9)	121(13.3)	393(43.3)	303(33.4)	907(100.0)
학원이 끝나는 시간	중등	8시이전	8~10시	10~11시	11시 이후	354(100.0)
	고등	78(22.0)	197(55.6)	58(16.4)	21(5.9)	143(100.0)
	계	20(14.0)	26(18.2)	28(19.6)	69(48.3)	497(100.0)
수면시간	중등	5시간이내	5~6시간	6~7시간	7시간 넘게	478(100.0)
	고등	52(10.9)	84(17.6)	162(33.9)	180(37.7)	405(100.0)
	계	189(46.7)	124(30.6)	56(13.8)	36(8.9)	883(100.0)

▶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과 등하교 시간의 변화

2008년 이후 입시와 일제고사의 경쟁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하였고,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자율학습, 보충수업이 새로 생기거나 더 강 제적으로 운영됨	265(54.5)	115(26.5)	380(41.3)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심해짐	71(14.6)	61(14.1)	132(14.3)
자율학습, 보충수업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 으로 운영됨	8(1.6)	5(1.2)	13(1.4)
등교가 빨라지거나 하교가 늦어짐	185(38.1)	113(26.0)	298(32.4)
등교가 늦어지거나 하교가 빨라짐	11(2.3)	11(2.5)	22(2.4)

별다른 변화가 없다	79(16.3)	196(45.2)	275(29.9)
잘 모르겠다	71(14.6)	55(12.7)	126(13.7)

▶ 중·고등학생들의 주당 사교육을 받는 시간,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의 변화
 학생들은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사교육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정부의 경쟁 교육 강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학교	시간				계	구분	학교급		
		1~4	5~8	9~12	13시간 이상			중등	고등	전체
주당 사교육을 받는 시간	중등	31 (8.6)	54 (15.0)	69 (19.1)	207 (57.3)	361 (100.0)	사교육 시간, 종류, 과목 등이 증가함	125 (26.8)	70 (17.4)	195 (22.4)
	고등	86 (47.3)	58 (31.9)	16 (8.8)	22 (12.1)	182 (100.0)	별다른 변화가 없음	217 (46.6)	186 (46.2)	403 (46.4)
	계	117 (21.5)	112 (20.6)	85 (15.7)	229 (42.2)	543 (100.0)	사교육 시간, 종류, 과목 등이 감소함	29 (6.2)	54 (13.4)	83 (9.6)
							잘 모르겠다	95 (20.4)	93 (23.1)	188 (21.6)

▶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2008년 이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변화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성적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2008년 이후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일제고사, 수능 성적 공개 등의 경쟁 일변도의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학교급			구분	학교급		
	중등	고등	전체		중등	고등	전체
많이 받는다	232 (47.3)	249 (57.2)	481 (52.0)	많이 증가했다	213 (43.8)	201 (46.4)	414 (45.0)
조금 받는다	168 (34.3)	122 (28.0)	290 (31.4)	증가했다	159 (32.7)	143 (33.0)	302 (32.9)
보통이다	65 (13.3)	35 (8.0)	100 (10.8)	별 차이 없다	106 (21.8)	80 (18.5)	186 (20.2)
잘 안 받는다	15 (3.1)	17 (3.9)	32 (3.5)	감소했다	4 (0.8)	3 (0.7)	7 (0.8)
전혀 안 받는다	10 (2.0)	12 (2.8)	22 (2.4)	많이 감소했다	4 (0.8)	6 (1.4)	10 (1.1)

▶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

아직도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체벌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학교급		전체
	중등	고등	
주 1회 이상 경험한다	281(58.1)	222(51.5)	503(55.0)
월 1회 이상 경험한다	62(12.8)	64(14.8)	126(13.8)
월 1회 미만 드물게 경험한다	40(8.3)	37(8.6)	77(8.4)
매우 드물게 경험한다	85(17.6)	87(20.2)	172(18.8)
3년 이내에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	16(3.3)	21(4.9)	37(4.0)

▶ 체벌을 경험한 이유

체벌의 이유는 학생들이 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두발과 용의 규정 위반과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수업 태도, 과제물 등으로 인해 또 다시 체벌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만들어 학생들의 지도불응과 교사의 체벌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두발복장규정 등 위반	323(69.5)	214(52.7)	537(61.7)
지각이나 결석	219(47.1)	235(57.9)	454(52.1)
과제나 수업태도	315(67.7)	222(54.7)	537(61.7)
성적	88(18.9)	62(15.3)	150(17.2)
교사의 지도 불응	180(38.7)	135(33.3)	315(36.2)
교사, 학교에 대한 저항	153(32.9)	83(20.4)	236(27.1)
기타	44(9.5)	37(9.1)	81(9.3)

▶ 벌점제, 상벌점제의 실태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다수의 학생들은 또 다른 학생 통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상벌점제로 학교생활에 더 많은 통제를 받는다고 느낀다	283(58.5)	219(50.9)	502(54.9)
상벌점제가 있어 더 좋은 것 같다	17(3.5)	20(4.7)	37(4.0)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138(28.5)	148(34.4)	286(31.3)
상벌점제가 없다	35(7.2)	32(7.4)	67(7.3)
기타	11(2.3)	11(2.6)	22(2.4)
계	484(100.0)	430(100.0)	914(100.0)

▶ 2008년 이후 학생 징계의 변화

2008년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는 경쟁 교육의 강화와 함께 학생들의 통제도 강화되어 각종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징계를 받는 것이 증가했다	199(41.4)	151(35.0)	350(38.4)
징계를 받는 것이 감소했다	18(3.7)	22(5.1)	40(4.4)
별다른 변화가 없다	85(17.7)	116(26.9)	201(22.0)
잘 모르겠다	179(37.2)	142(32.9)	321(35.2)

▶ 학생회를 통한 학교 운영 참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단지 통제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45(9.4)	26(6.1)	71(7.8)
학생들이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148(30.8)	129(30.2)	277(30.5)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우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99(20.6)	129(30.2)	228(25.1)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188(39.2)	143(33.5)	331(36.5)

▶ 동아리 활동 실태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통제와 교육이 학교의 자의적인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편이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동아리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며 지원도 충분함	60(12.4)	59(14.0)	119(13.2)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동아리는 허가가 나지 않거나 폐쇄될 수 있음	71(14.7)	100(23.8)	171(18.9)
학교의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168(34.8)	205(48.7)	373(41.3)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	182(37.7)	121(28.7)	303(33.5)
학생들이 동아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다	95(19.7)	99(23.5)	194(21.5)
기타	53(11.0)	33(7.8)	86(9.5)

▶ 학생 차별 실태와 유형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특히 성적과 외모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으며, 교사의 언어나 체벌에 의한 차별의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성적	297 (61.6)	276 (64.9)	573 (63.2)	교사에 의한 언어적 폭력	211 (57.3)	187 (54.7)	398 (56.1)
성별	39 (8.1)	66 (15.5)	105 (11.6)	교사의 체벌	190 (51.6)	112 (32.7)	302 (42.5)
나이나 학년	93 (19.3)	83 (19.5)	176 (19.4)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 폭력, 놀림, 따돌림	87 (23.6)	66 (19.3)	153 (21.5)
성정체성, 성적 지향(동성애 등)	33 (6.8)	19 (4.5)	52 (5.7)	독서실, 급식실 등 시설 이용	31 (8.4)	79 (23.1)	110 (15.5)
장애 여부	59 (12.2)	30 (7.1)	89 (9.8)	학생회장 반장 등 임원 출마	41 (11.1)	53 (15.5)	94 (13.2)
인종	12 (2.5)	12 (2.8)	24 (2.6)	정보공개	32 (8.7)	26 (7.6)	58 (8.2)
경제력	55 (11.4)	54 (12.7)	109 (12.0)	기타	33 (9.0)	32 (9.4)	65 (9.2)
외모, 신체적 특징	131 (27.2)	84 (19.8)	215 (23.7)	총 응답인원	368	342	710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	125 (25.9)	92 (21.6)	217 (23.9)				
기타	15 (3.1)	7 (1.6)	22 (2.4)				

▶ 학생 인권 보장 실태 및 2008년 이후 인권 관련 교육환경의 변화

인권은 교문 앞에 머문다는 말처럼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들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으며 특히 2008년 이후 학교의 인권상황은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인권을 매우 잘 보 장하고 있다	7 (1.5)	14 (3.2)	21 (2.3)	학생인권을 보장 하는 방향으로 바 뀌었다	18 (3.7)	15 (3.5)	33 (3.6)
인권을 잘 보장하 고 있다	23 (4.8)	22 (5.1)	45 (4.9)	학생인권을 침해 하는 방향으로 바 뀌었다	156 (32.4)	136 (31.4)	292 (31.9)
보통이다	233 (48.3)	172 (39.8)	405 (44.3)	별다른 변화가 없 다	157 (32.6)	169 (39.0)	326 (35.6)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103 (21.4)	127 (29.4)	230 (25.2)	잘 모르겠다	151 (31.3)	113 (26.1)	264 (28.9)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다	116 (24.1)	97 (22.5)	213 (23.3)				

▶ 현 정부의 학생 인권 보장 노력 정도

현 정부에 대한 학생 인권 보장 노력에 대하여 학생들은 상당수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 출범이후 사회적으로 인권 탄압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구 분	학교급		전 체
	중등	고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4(0.8)	7(1.7)	11(1.2)
노력은 하고 있다	37(7.7)	13(3.1)	50(5.5)
보통이다	141(29.4)	62(14.7)	203(22.5)
노력이 부족하다	118(24.6)	130(30.7)	248(27.5)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	179(37.4)	211(49.9)	390(43.2)

▶ 교육 정책에 대한 태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입시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잘 인지하는 학생들일 수록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학생들을 규제하는 상벌제제와 휴대폰금지조례, 입시제도와 관련된 자사고, 경쟁교육의 상징인 일제고사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많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는 찬성의 입장이 많다. 학교 자율화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대가 우세하고 나머지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입자율화는 찬성 의견 입장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당장의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것 보다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교육 정책	학교	찬반 의견			계	χ^2 검증
		찬성	반대	별 의견 없다		
학교자율화	중등	207(42.9)	148(30.7)	127(26.3)	482(100.0)	29.008 ***
	고등	125(29.5)	202(47.6)	97(22.9)	424(100.0)	
	계	332(36.6)	350(38.6)	224(24.7)	906(100.0)	
	정책인지학생	100(42.7)	96(41.0)	38(16.2)	234(100.0)	
그린 마일리지(상벌제점)	중등	53(11.0)	345(71.4)	85(17.6)	483(100.0)	1.999
	고등	57(13.4)	304(71.5)	64(15.1)	425(100.0)	
	계	110(12.1)	649(71.5)	149(16.4)	908(100.0)	
	정책인지학생	93(13.3)	506(72.4)	100(14.3)	699(100.0)	

교육 정책	학교	찬반 의견			계	X ² 검증
		찬성	반대	별 의견 없다		
일제고사(전국학력평가)	중등	36(7.5)	386(80.1)	60(12.4)	482(100.0)	75.749 ***
	고등	122(28.9)	243(57.6)	57(13.5)	422(100.0)	
	계	158(17.5)	629(69.6)	117(12.9)	904(100.0)	
	정책인지학생	125(20.5)	422(69.3)	62(10.2)	609(100.0)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300	중등	150(31.1)	215(44.6)	117(24.3)	482(100.0)	43.788 ***
	고등	65(15.3)	277(65.2)	83(19.5)	425(100.0)	
	계	215(23.7)	492(54.2)	200(22.1)	907(100.0)	
	정책인지학생	98(35.6)	134(48.7)	43(15.6)	275(100.0)	
대입자율화(3블페이지,입 학사정관제 등)	중등	224(46.5)	161(33.4)	97(20.1)	482(100.0)	2.058
	고등	183(43.2)	161(38.0)	80(18.9)	424(100.0)	
	계	407(44.9)	322(35.5)	177(19.5)	906(100.0)	
	정책인지학생	135(46.9)	108(37.5)	45(15.6)	288(100.0)	
학생인권 조례	중등	309(64.6)	80(16.7)	89(18.6)	478(100.0)	1.445
	고등	289(68.0)	60(14.1)	76(17.9)	425(100.0)	
	계	598(66.2)	140(15.5)	165(18.3)	903(100.0)	
	정책인지학생	100 (67.6)	30(20.3)	18(12.2)	148(100.0)	
휴대전화 금지조례	중등	63 (13.1)	343(71.2)	76(15.8)	482(100.0)	1.356
	고등	51 (12.0)	295(69.4)	79(18.6)	425(100.0)	
	계	114 (12.6)	638(70.3)	155(17.1)	907(100.0)	
	정책인지학생	55(13.0)	310(73.5)	57(13.5)	422(100.0)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전국청소년학생연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다함께

문 의 : 010-2480-3328 공현 또는 onlyasunaro@naver.com

제 목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일시 : 2009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3호

1.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의 현주소> 토론회 개요

◆ 취지

: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한다.

: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진단하며 대책을 논의한다.

◆ 토론회 순서

1부 : 학생인권실태 보고 및 발표 (오후1:30-2:40)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30-1:50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분석	발칙한 (고등학생)
1:50-2:00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학생 사례 발표	박민규 (고등학생)
2:00-2:10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교사 사례 발표	조영선 (교사)

2:10-2:20	학생인권현실에 대한 학부모 사례 발표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20-2:40	실태조사 결과 및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사회 : 발칙한)
2부 : 학생인권 현실 개선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겸 다과회 (오후2:50-3:50)		

2. 2008년 이후 중고등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 이 요약은 주목할 만한 내용만 일부 발췌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을 참고

(1) 이명박 이후 학생인권은 악화... 정부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3%(28)	28.0%(184)	28.7%(188)	33.5%(220)	5.6% (36)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보장하는방향	침해하는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0%(54)	32.5%(444)	37.3%(510)	23.9%(327)	2.2%(30)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중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6%(4)	9.3%(61)	20.9%(137)	24.4%(160)	38.4%(252)	6.4%(42)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2%(3)	3.7%(50)	13.6%(186)	28.0%(382)	51.9%(709)	2.6%(35)

(2) 입시스트레스는 “많이 증가”가 압도적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많이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감소	무응답
44.2% (290)	28.7% (188)	23.3% (153)	0.8% (5)	0.8% (5)	2.3%(15)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많이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감소	무응답
51.9%(709)	29.9%(408)	15.8%(216)	0.9%(12)	0.6%(8)	1.0%(13)

(3) 자율학습, 보충수업, 사교육은 심해져 ...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하루 12시간 이상 있으며, 수면시간은 6.7시간(중학생), 5.6시간(고등학생)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졌다.
36.7% (241)	13.4% (88)	2.6% (17)	22.7% (149)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3.0% (20)	25.2% (165)	22.3% (146)	2.8% (18)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졌다.
32.7%(446)	9.8%(134)	2.6%(36)	20.1%(274)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2.3%(32)	35.9%(491)	17.0%(232)	0.9%(12)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0.3% (199)	5.3% (35)	36.8% (241)	21.8% (143)	5.8% (38)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0.7%(283)	10.7%(146)	41.2%(563)	20.6%(282)	6.7%(91)

등하교시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평균 수면시간, 평균 학원이 끝나는 시간 등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8시08분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7시45분
오전 8시 이전 등교	38.1%(250)	오전 8시 이전 등교	86.9%(1181)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4시15분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8시21분
오후 4시 이후 하교	60.8%(399)	오후 9시 이후 하교	64.7%(884)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8시간4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12시간35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9시31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11시20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14.2시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8.3시간
평균수면시간	6.7시간	평균수면시간	5.6시간
6시간 이하 수면	40.7%(267)	6시간 이하 수면	75.3%(1028)

(4) 매우 심한 성적 차별... 그 다음으로 외모와 나이학년 차별 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59.3%(389)	20.1%(132)	23.3%(153)	6.1%(40)	15.4%(101)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2.3%(15)	12.6%(83)	28.4%(186)	22.4%(147)	3.7%(24)	6.3%(41)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인종
69.6%(951)	14.9%(204)	27.6%(377)	3.5%(48)	7.3%(100)	1.0%(13)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15.7%(214)	25.9%(354)	17.0%(232)	1.7%(23)	3.1%(42)	

(5) 두발복장규제, 체벌 등도 전반적으로 심해져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4.1% (27)	21.2% (139)	4.6% (30)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2.2% (277)	26.7% (175)	22.7% (149)	2.6% (17)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2.6%(36)	25.5%(348)	4.3%(59)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1.1%(562)	34.0%(465)	17.6%(241)	1.0%(14)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52.1%(342)	15.5%(102)	8.7%(57)	14.9%(98)	5.8%(38)	2.9%(19)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49.9%(681)	14.0%(191)	9.5%(130)	19.9%(272)	5.1%(70)	1.5%(20)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체벌강화	체벌약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약화
24.2%(159)	5.2%(34)	13.4%(88)	3.8%(2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9.0%(190)	36.1%(237)		3.2%(21)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체벌강화	체벌완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완화
20.1%(275)	4.9%(67)	13.8%(188)	3.3%(45)
변화없다	모름		무응답
34.9%(477)	34.5%(471)		1.6%(22)

(6) 학생들을 통제하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중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5.4%(298)	4.7%(31)	21.8%(143)	21.3%(140)	3.5%(23)	3.2%(21)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9.4%(675)	5.6%(77)	20.5%(280)	18.7%(25)	2.9%(39)	2.9%(39)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의견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6%(135)	36.3%(238)	19.7%(129)	18.8%(123)	4.7%(31)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5.4%(101)	65.1%(427)	14.8%(97)	4.7%(31)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4.5%(198)	35.1%(479)	23.6%(322)	23.6%(322)	3.3%(45)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7.2%(235)	66.4%(907)	13.9%(190)	2.5%(34)

(7) 정책에 대한 인지도 낮으며 일제고사 등 경쟁적 교육정책에 반대 뚜렷...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 많아

일제고사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의견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7.4%(180)	39.9%(262)	17.5%(115)	10.1%(66)	5.0%(33)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9.6%(63)	74.6%(488)	11.6%(76)	4.4%(29)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4%(278)	47.9%(654)	18.2%(249)	10.1%(138)	3.5%(4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5.7%(214)	72.2%(986)	9.6%(131)	2.6%(35)

고교다양화(자사고 등)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의견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9.0%(59)	22.1%(145)	35.8%(235)	28.0%(184)	5.1%(33)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22.0%(144)	51.7%(339)	21.5%(141)	4.9%(32)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6%(104)	26.0%(355)	32.1%(438)	31.0%(423)	3.3%(4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8.6%(254)	63.5%(868)	15.2%(207)	2.8%(37)

학생인권조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3%(48)	15.9%(104)	38.3%(251)	33.7%(221)	4.9%(32)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61.4%(403)	13.6%(89)	19.5%(128)	5.5%(36)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4.2%(58)	13.0%(177)	38.3%(523)	41.8%(571)	2.6%(35)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73.1%(998)	10.2%(139)	11.5%(157)	5.3%(72)

(9) 영남지역이 학생인권 상황 가장 열악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355)	1.1%	3.9%	43.4%	22.8%	22.5%
영남(88)	2.3%	3.4%	34.1%	26.1%	31.8%
호남(131)	3.8%	9.9%	46.6%	23.7%	12.2%
충청(64)	1.6%	1.6%	40.6%	28.1%	25.0%
강원(9)	0.0%	11.1%	33.3%	22.2%	33.3%
제주(0)	0.0%	0.0%	0.0%	0.0%	0.0%
전체	1.8% (12)	4.9% (32)	42.4% (278)	23.8% (156)	22.4% (147)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648)	0.6%	3.5%	29.9%	34.0%	29.8%
영남(274)	0.0%	0.7%	23.0%	44.9%	30.3%
호남(357)	3.1%	5.6%	47.1%	20.4%	21.0%
충청(58)	0.0%	3.4%	43.1%	31.0%	20.7%
강원(19)	0.0%	5.3%	15.8%	31.6%	31.6%
제주(2)	0.0%	0.0%	0.0%	100.0%	0.0%
전체	1.1%(15)	3.5%(48)	33.4%(456)	32.4%(443)	27.3%(373)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355)	3.4%	27.3%	28.7%	32.4%
영남(88)	4.5%	39.8%	30.7%	21.6%

호남(131)	6.9%	15.3%	23.7%	51.9%
충청(64)	4.7%	35.9%	31.3%	25.0%
강원(9)	0.0%	44.4%	44.4%	11.1%
제주(0)	0.0%	0.0%	0.0%	0.0%
전체	4.3%(28)	28.0%(184)	28.7%(188)	33.5%(220)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648)	4.3%	32.4%	41.4%	20.1%
영남(274)	1.8%	44.5%	35.4%	17.2%
호남(357)	4.8%	23.2%	30.3%	38.7%
충청(58)	6.9%	29.3%	46.6%	15.5%
강원(19)	0.0%	42.1%	31.6%	10.5%
제주(2)	0.0%	0.0%	100.0%	0.0%
전체	4.0%(54)	32.5%(444)	37.3%(510)	23.9%(327)

(10)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말

“두발규제, 강제야자, 입시경쟁...

그린마일리지는 특히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점수로써 메긴다는 소린데 안그래도 점수로 매겨 지고있고 학생은 선생님의 점수를 메기고 선생은 학생의 점수를 메깁니다. 죽고죽인다는 소리죠. 기분이나쁘네요.”

“2009년에만 우리학교 학생중 두명이 자살해서 죽었다. 사실 자살기도한 사람은 더 많을 것이다. 한명은 학교에서 떨어졌다. 우리모두는 그 광경을 봤고 우울했고 슬펐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미래상황인것 같다. 무섭다. 학교는 정신병원같고 선생님은 우리를 감시한다. 한국이 너무 지옥같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걸 후회하고 학교와 교육관련의 모든 기관,정책은 우리를 옹호할 뿐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는 무시된다. 인권운운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지금 나는 나에게 인권이란게 주어지기는 했는지 내가 인격적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고3이 될때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겠다.”

“보충수업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까? 지금 우리 반의 학생들만 해도 과반수가 전부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12시가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청, 신종플루 비상으로 아자 한 번 빼겠다는데 필요없다고 빼지 말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휴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압박을 준 이유가 궁금하다.”

“교육정책 진심 바뀌어야 함 이견 안됨

아 그리고 학교들도 너무 경쟁적이지 않게 가야함 대학 많이 보내는걸로 경쟁하는건 좀 아닌듯 싶음 지네 경쟁때매 학생들이 너무 힘들”

“MB정부는 제발 전국 학력평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학력평가가 대학교를 갈때 면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 학교가 난리다. MB정부의 줄세우기 정책 때문에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